

# 민주 “5개월 내 검찰 개혁 마무리”

### TF 첫 회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7월까지 법안 만들어 당론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해 수사권 이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찰개혁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

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초순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여순 고속도로 건설”

### 권향협 등 전남 동부권 당선자 5인 ‘6대 공동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동부권 당선인 5명이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권향협(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조계원(여수시을)·주철현(여수시갑) 당선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 6대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은 전남의 22개 시군 중, 동부권 3개 시와 6개 군에 전남 전체 인구 180만 명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 경제 생산 실적의 82%를 점하고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8000억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뿐만 아

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인들이 이날 발표한 6대 공동공약은 ▲윤석열 정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및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건설 ▲남해안-남중권 경전철 건설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및 조속 추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분원 유치 등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빠진 나라와 도단에 빠진 민생을 구하려는 준엄한 명령으로 민주당에 과반을 넘는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셨다”며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 명령을 실천하는데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민 공감’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원구성 돌입...국힘 “법사위·운영위 사수”

### 원내대책회의...추경호 “시한을 정할 수 없는 사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국회의 오랜 관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출범 직후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를 들

어 “폭주하던 국회는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에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상식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6월 7일인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시한을 딱히 정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제 지극히 초기 단계의 여야 대화가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좋은 타협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진표 “진영 주장 반대를 배반자로 여겨서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익을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보수와 진보의 대립 속에 진영정치와 팬덤정치가 생겼고, 이에 따라 나쁜 폐해도 생겨났다”며 “이같은 문제들

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나를 뽑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며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지만,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동훈 등판론’에 ‘친한계’ 세력화 관심

### 최측근 장동혁, 라디오서 총선 책임론 해명...국힘 초선 움직임도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화가 나타나질 주목된다.

아직 ‘친한(친한동훈)계’라고 할 만큼 뚜렷한 색채를 띤 계파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중용했던 인사들이 그의 당권 도전에 전위 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장동혁·김형동 의원이 최측근으로 꼽힌다.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의원도 ‘숨은 친한계’로 거론되기도 한다.

총선 직후 한 전 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직에서 물러난 이들은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물밑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일부 친운(친윤석열)계의 공격에 방어막을 쳐왔다.

공개 행보를 삼가는 한 전 위원장의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변호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던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론’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데 대해 “한 전 위원장에게 (유세) 외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원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이 영입했던 인사들이 ‘친한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정치 행보를 재개할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가 7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고, 실무 준비에 30~40일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 등록 시점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중·하순을 기점으로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발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